

'광주복합쇼핑몰 3종' 16조4412억 경제효과·일자리 5만7123개

광주지역에 복합쇼핑몰 3종이 들어서면 16조441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15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광주에는 현재 옛 전방·일신 방직 부지에 '더현대광주', 광천터미널 부지에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통한 '더 그레이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추진되고 있다.

쇼핑과 문화 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 복합시설 3종이 광주에 들어서면 건설·조성 등 시설 투자 단계에서 생산유발 효과는 10조717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4412억원 등 16조441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5만712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가 5조7238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5100억원이 발생하며 4만693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복합쇼핑몰 종류별로는 더현대광주에



광주 복합쇼핑몰 3종. 왼쪽부터 '더현대광주' '더 그레이드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진=광주시청 제공·뉴스시DB

화장품·가전·가구·생활잡화 제외... 골목상권 동반 상승

대기업·소상공인·전문가·지자체 상생발전협의회 구축

상 방문객 3000만명 중 타지역 유입인구가 39.5%이며 주변 상권 동시 방문 인구가 67%일 것으로 예측됐다. 화장품 업종을 제외한 슈퍼마켓·음식점·의료·패션·잡화·커피·제과·가전·가구·생활잡화 등의 업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분석됐다.

'더 그레이드 광주'가 개점 할 경우 연간 방문객은 24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38%가 외부 유입으로 나타났다. 또 타 지역 인구 중 69.3%가 주변 상권을 동시에 방문할 것으로 분석돼 화장품, 가전·가구·

생활잡화 업종을 제외하고 긍정평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이 결합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연간 3000만명이 방문하고 타 지역 유입인구 65.6%, 주변 상권 동시 방문 31.2%로 나타났다. 의료·패션·잡화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용역 결과보고회에서는 복합쇼핑몰 3종이 들어설 경우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광주골목포인트 발행, 상생복합시설 조

성,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 확대, 대규모점포와 1대 1 매칭 지원 대책이 제안됐다.

광주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상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상공인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대기업·소상공인·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대규모점포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

광주시, 대중교통 많이 탈수록 혜택 커진다

'G패스'-'모두의카드' 연계 전국 대중교통 환급

'광주 지(G)-패스' 이용자들은 내년 1월부터 일정액만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탈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정부가 도입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광주 지(G)-패스' 이용 시민에게 두 제도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통합 환급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케이(K)-패스 가입자 중 한 달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환급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제도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광주시는 이에 맞춰 '광주 지(G)-패스'와 '모두의 카드'를 연동해 시민이 별도의 선택이나 추가 신청 없이도 월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더 큰 환급 혜택을 자동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시민이 케이(K)-패스 카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한 달간 총 이용금액을 산정해 '광주 지(G)-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제도를 자동 적용한다. 시민은 두 제도를 비교하거나 선택할 필요 없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35세부터 39세 시민도 '청년'에 포함된 '광주 지(G)-패스'처럼 '모두의 카드'에도 동일한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 기준(청년 기준)보다 청년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광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다. /신정팔 기자



광주지역에 적용되는 환급기준액은 일반형의 경우 4만원부터 5만5000원이고, 플러스형의 경우 7만5000원부터 9만5000원이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급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GTX 등 광역 대중교통까지 모든 수단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고속철도(KTX), 항공, 고속버스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특히 35세부터 39세 시민도 '청년'에 포함된 '광주 지(G)-패스'처럼 '모두의 카드'에도 동일한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 기준(청년 기준)보다 청년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광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다. /신정팔 기자

광주·전남 외국인 10년 새 2배 이상 ↑ ... 지역경제 '완충 역할'

어업·제조업 중심 외국인력 확대 지속... 외국인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활용해야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 인구가 지난 10년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속도로 증가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을 떠받치는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5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현황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수는 전국적으로 2013년 112만명에서 2023년 194만명으로 약 1.7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1만6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2.2배, 전남은 2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2.5배 늘어나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기초지자체는 광주 광산구(2만1300명)였으며, 전남 영암군(9600명), 광주 북구(6600명), 전남 나주시

(51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증가율은 광주에서 1.8배(2.8배), 전남에서는 완도군(6.8배), 진도군(6.1배), 신안군(3.7배)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고흥·완도·진도·신안 등 전남 남해안 어촌 지역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김양식업이 호황을 누리는 진도군의 외국인 근로자는 2013년 200명에서 2023년 1600명으로 8.1배 늘어 고령화로 인한 어업 인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력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산업 구조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암군 등 제조업 공단 지역에는 베트남, 우

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농림업 중심의 전남 보성군은 베트남·태국·캄보디아 출신이 많았고, 어업 비중이 큰 진도군은 베트남·스리랑카·인도네시아 출신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외국인 국적 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유입 규모가 더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확인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일부 남성·청년층 내국인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증가가 자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와 달리 자본 투자 규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생산의 전문화와 분업 확대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관측됐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내국인 인구의 순유출 역시 뚜렷한 통계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인구구조 개선과 연계한 정주형 이민 정책으로 전환', '특정 국적 편중 완화를 위한 국적 다양성과 이주 분산 정책', '내·외국인력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고속권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산업 고부가가치화', '외국인 정주와 지역 문화·관광을 연계한 협력 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외국인은 지역경제의 외생적 충격을 완화하는 잠재적 자원"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길 기자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26일까지 축사 소재 읍면동서 희망 농가 접수

이 주도에 각 농장에 적합한 스마트 축산 장비를 설치·보급하고,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분석할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가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농장 운영을 하도록 돕는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 공모를 통해 선

정된 25개 업체가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비 세트(패키지)를 구성해 축산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ICT 장비 도입을 촉진하고 농가의 경영 효율성과 사육관리 능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농가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ICT 장비 보급을 통해 축산농가의 현장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시군 읍면동서 2026년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악취·분뇨 관리, 탄소 저감,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선정된 ICT 기업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 가꾸